
 ◆ 政府 施策 ◆

中企 固有업종 解除 예시

— 商工部 97년까지 단계적으로 149개 업종 해제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보호속에 안주해 자생력 배양에 소홀해지고, 개방화로 외국상품의 진출이 확대되어 고유업종지정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商工資源部는 앞으로 이 제도를 단순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극적 보호장치로서 보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점차 경쟁요소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고유업종을 축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형 업종’으로서 해제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의한 독과점화의 우려가 있는 업종은 계속 존치키로 했다.

1. 업종조정 (안)

가. 기본방향

- 고유업종 제도의 단계적 축소 운용 방침에 따라 신규 추가지정은 배제
-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제가 필요한 업종은 과감히 해제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시기간 부여
- 경제여건의 변화로 고유업종 지정의미를 상실한 업종은 조기해제
- 고유업종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업종으로서 해제시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큰 품목은 계속 존치

나. 적용기준

1) 해 제

-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일정기간만 더 보호하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업종
- 수요 변화, 대체품 개발 등으로 이미 사양화 되었거나 사양화되어가는 업종
- 소수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영위 중소기업도 소수에 불과한 업종
- 외국상품의 시장점유율 또는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아 실효성이 없거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제가 필요한 업종 등

2) 범위조정

-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저해가 되는 분야
- 소비자 안전 및 위생에 저해가 되는 분야

다. 중소기업업종 해제업종 (전기공업 분야)

■ '94. 9. 1 해제

- 무정전 전원장치
- 등안정기 (형광등용에 한한다)
- 아아크 용접기 (교류범용, CO₂·TIG·MIG·MAG 용접기에 한하며 자동식, 인버터제어방식
·로봇트식·특수전용기는 제외한다)
- 배선기구 (옥내용 소형스위치로서 수동에 의한 점멸기능만 갖는 것에 한한다)
-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 (비절연)
- 저항용접기 (SPOT용접기, PROJECTION 용접기에 한하며 자동식, 로봇트식, 특수전용기는 제외한다)
- 정류기 (4천KW 이하에 한한다)

■ '95. 1. 1 해제

- 동복강선

■ '97. 1. 1 해제

- 리크로우저 (27KV, 560A 이상 10KV급에 한한다)

■ '98 이후 유보

- 컷아웃 스위치 (25KV급에 한한다)
-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25.8KV, 400A, 15KV급에 한한다)

2. 고유업종 축소에 따른 보완대책

○ 사업 조정제도 개선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

- 사업조정 명령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장기화
- 사업조정 신청시 미리 업계의 자율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우선지원

- 중소기업자동화 사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협동화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공동시설 구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화 사업 (공동기술개발, 공동자동화, 공동정보화 등) 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기술지도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점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
-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시 우대

○ 기타

- 중앙회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 선정기준에 추가
- 중진공의 중소기업연수원 연수부담금 감면

工業基盤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확정

- 상공부, 공 기반 자금 57개 · 생산기술개발자금 124개 공고 -

정부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및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이 지원할 57개 공업기반기술개발과제와 134개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과제 등 총 191개 94년도 신규기술개발과제를 확정, 공고했다.

또 지난해 공고했던 과제에 대한 신청 결과를 심사, 총 62개 과제에 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공고에서 공통애로기술 54개 과제, 중기거점기술 3개 등 공업기반기술개발과제 57건에 대해서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총개발비 3분의 2까지 지원되는 공기반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에 자격이 주어졌으며 산업기술연구조합이나 민간생산기술연구소가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기거점기술개발 사업관련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기술과제의 일괄개발이 가능토록 관련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기관이 신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인 돼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 해외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134개 과제는 총 개발비의 100% 이내에서 융자지원키로 하고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산업은행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산업은행의 생산기술개발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공고된 과제이외에도 수시로 접수를 받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과제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반기술개발자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의 추진과제는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과 공업발전기금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성공가능성 및 사업성이 희박한 과제는 중단시킬 계획이다.

■ '94년도 공동애로기술 개발사업 지원대상 과제 (중전기기)

- 2000KW급 산업용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개발
- 400W급 외권식 고정자형 AC서보모터 개발

■ '94년도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과제 (중전기기)

- 역율 보상형 3상 무정전 전원장치 개발
- 100Hp급 전동기 구동용 IGBT 인버터 개발
- 컴퓨터 제어방식의 보호계전기 시험장치 개발
- 방폭형 소방용 전기기 제품개발
- 부하시 탭 절환기 개발

中企自動化 1500社 5천억 支援

— 商工部 하반기 중소기업 자동화추진계획 확정 —

정부는 중소기업 자동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중 5천억원을 투입, 1500여개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의 올 하반기 중소기업 자동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동화사업 자금지원 대상업체는 제조업전업률이 5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중 자동화투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 영위업체 ▲ 종업원 20인 이하의 기술집약형 소기업 ▲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 수출기업화사업 대상업체 ▲ ISO 9000 인증 획득업체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기업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계열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 하반기 자동화사업은 8월 12일 사업공고를 통해 9월 16일까지 사업계획서의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2개 지부에 지역별 심사반을 구성, 3주 이내에 추천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동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동화추진 중앙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중진공 12개 지부에는 자동화추진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자동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96년 상반기 준공예정이었던 경기도 시화공단내 자동화센터를 95년말까지 앞당겨 준공, 자동화교육센터로서 자동화 설계, 유지 및 보수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의 자동화 기술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급하는 한편 자동화기기의 전시, 상담, 판매 및 관련 기술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동화 추진업체에 대해서는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지에서 5명의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 중소기업의 자동화 설계용역 및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중에는 자동화추진업체의 자동화 전담요원 50명을 미국·일본등에 연수시키고 내년에는 연수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貿易의 날, 中小企業 褒賞 擴大

— 商工部 ‘貿易의 날’ 포상요령 공고 —

정부는 올해 무역의 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수출업체 종업원에 대한 포상에서는 생산직과 여성 및 해외근로자를 우대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11월 30일 개최되는 제 31회 무역의 날 행사부터는 정부포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1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에만 주어지던 정부포상을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미만인 업체중에서도 자기상표 수출, 우수품질제품 수출, 소액수출 등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한 경우 포상이 가능토록 하고 유공자 표창에서는 생산직 및 여성근로자와 해외근무자를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포상요령을 공고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이번 무역의 날 포상은 종전과 같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수출의 탑은 지난해와 같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100만불과 500만불등 2개의 백만불대 탑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되는 1천만불과 5천만불등 천만불대 탑 2종, 그리고 1억, 5억, 10억, 50억, 100억불로 구분되는 억불대 탑 5종등 총 9종의 수출의 탑이 수여된다.

수출의 탑은 93년 7월부터 94년 6월말까지의 수출이 처음으로 해당기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수출증가율이 우리나라의 평균수출증가율 10.6%를 상회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수출실적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업체간 거래는 중복 계산되지 않으며 수탁가공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인정한다.

정부포상은 대기업은 1천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은 1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의 대표 및 종업원과 기타 유공자에 수여하며 수출의 양적확대 보다는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평가시 수출실적과 함께 신시장개척, 대일수출, 수입대체를 포함한 기술개발등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 1994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 가. 무역의 날 31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와 질적고도화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을 수여함
-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포상은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함
 -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신시장개척, 대일수출, 수입대체 등 기술개발, 수출전업비율등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함
 - 다만, 종합상사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수출대행실적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평가함
- 나.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며 기타 유공자의 포상은 축소함
- 다. 수출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해외근무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함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출의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만불대 탑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5백만불 탑 ○천만불대 탑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5천만불 탑 ○억불대 탑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5, 10, 50, 100억불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
포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훈장 (5등급) - 산업포장 ○표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상공자원부장관 표창 - 한국무역협회회장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출업체 - 자기상표수출업체 - 우수품질제품수출업체 - 소액수출업체 - 일본시장개척유공업체 ○기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교포무역인 - 무역대리업자 - 무역지원 유공자

3. 포상신청 및 추진절차

가. 신청서 배부 : '94. 8. 1(월)~8. 16(화)

나. 신청 및 추천기간 : '94. 8. 8(월)~8. 24(수)

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업부 (551-5333 /6) 및 국내 각 지부

ISO 9000 인증제도 開放

— 工振廳, 外國인증기관도 요건갖출뎌 승인키로 —

ISO 9000 인증제도가 외국인증기관에도 전면 개방된다.

공진청에 따르면 ISO 9000 인증제도의 법적 실시근거가 되는 품질경영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외국인증기관도 국내인증기관과 동등하게 ISO 9000 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을 갖춘 외국인증기관에 한해 ISO 9000 기관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증기관은 LR QA(로이드 선급협회 인증기관), DNV QA(노르웨이 선급협회 인증기관), TUV(독일 검사기관) 등 약 7~8개 기관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국내에서 법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나 BSI QA(영국표준협회 인증기관) 등 일부기관은 법인 설립없이 ISO 9000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진청은 그간 ISO 9000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심사원 양성등 국내인증기관 육성에 주력하였으나 이제는 국내 인증기관의 수준이 어느정도 국제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인증제도를 과감히 개방하여 국내기관과 외국인증기관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품질경영체제 확립 및 대외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공진청은 “이번에 외국기관에도 인증제도를 개방한 것은 국내기관의 인증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외국인증기관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정부가 국내 ISO 9000 인증기관의 육성에 주력하는 틈을 타서 과도한 심사비용 부과, 부실한 심사실시, 컨설팅 겸업으로 인한 인증서의 남발등 상업적 인증활동을 해온 외국인증 기관들은 더이상 국내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 技術先進國 목표

— 科技處, 과학기술장기발전계획案 마련 —

2000년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장기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2010년 과학기술발전 長期計劃’의 종합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처는 ‘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220여명이 참가해 수립한 2010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을 오는 98년까지 2~3배 증가시켜 러시아·호주·이탈리아·네덜란드를 능가하는 스웨덴·캐나다 수준으로 높이고 2010년에는 프랑스·영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先進國(G7)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과기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 科技發展長期計劃을 오는 10월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 국가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지침으로 활용하는 동시 내년부터 1단계시행 (95~98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기발전장기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투자를 지난 92년 63억달러에서 98년에는 227억달러, 2010년에는 959억달러 규모로 늘리고 연구원수를 92년 8만8764명에서 98년 14만3520명, 2010년에는 24만8547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이같은 장기계획의 추진에 따라 ▲국내 반도체·조선·가전·섬유화학산업은 90년대중 세계 최선두를 지향하는 동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新物質창출·정보통신·자동차 등은 21세기초에 세계 최선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생명공학·정밀기계·기계자동화·로봇·컴퓨터·항공·원자력·환경 기술등은 2010년에 세계선두에 진입시키고 ▲우주·해양·에너지·기초과학연구등은 2010년께 세계 중상위에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國內外 情報 ◆

日 電力社 해외資材調達 擴大 — 조달대상국가와 기업확대 예상 —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엔高를 극복하고 미국등의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재조달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